

## 재검토가 아니라 N차 검토가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의 지극히 개인적인 교훈



김소영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 학사
-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 Northwestern Univ. 사회과학의수학적방법론 석사(이학)
- Northwestern Univ. 정치학 박사
- Univ. of Chicago Social Science Computing Center, Data Archivist
- Florida Atlantic Univ. 조교수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대학원장
- Georgia Tech 방문교수
- 세계경제포럼 글로벌미래위원회 위원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심의 위원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나는 2020년 여름 갑자기 (혹은 예견했던 대로)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나머지 일정을 이끌게 되었다. 당시 경주 월성원전 지역공론화가 막 시작된 시점으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가 결국 맥스터 증설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탈핵 진영의 비판과 지역 공론조사 문항을 둘러싸고 한창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당시 위원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두 명의 위원이 재검토가 엉망으로 흘러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동반 사퇴했을 때, 대부분 회의에서 이들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던 내가 (아마도 예견했던 것과 달리) 위원회에 남기로 한 결정은 훗날 어떻게 평가될 지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양쪽에서 비판만 받을 게 뻔한 위원장을 떠맡는 것이 바보같은 짓이었음엔 분명하다. 당시 나는 학교 50년사 편찬위원장을 비롯해 나름 굵직한 사업들을 맡고 있었고, 과학기술정책 분야가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처럼 역사가 오래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대외적으로는 일종의 일당백 역할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남기로 한 결정은 지금 돌이켜보면 재검토가 아니라 N차 검토가 필요하다는 확신이었다. 이걸 멋지게 포장해 다시 쓰기보다는 당시 사퇴로 인해 더 이상 회의에서 보지 못하게 된 분들에게 보낸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1. 먼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기여하셨던 두 분 위원님께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2. 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의견 수렴 과정은 수십년 같듯이 묵힌 이슈답게 상당한 진통과 갈등으로 진행 중이고 그 결과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울어진 결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다만 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에서 보이콧을 한 탈핵 진영과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의 진행 방식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에서 본격적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과 예전처럼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담당 부처인 산자부의 결정은 전자였고, 위원회 처음 몇 개월은 위원회의 정체성과 역할(조정이나 중재냐)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그 때부터 위원들의 사퇴 가능성은 상존했고, 그 와중에 전문가 그룹 운영도 A 위원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겨우 마무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의 정치인들이 핵심 이해관계자인 탈핵 진영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주무 부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라면 당시 국정과제를 따랐을 것이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검토하려면 (우리 의제이기도 하지만) 산자부를 넘어 정권의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인데 담당 부처에 맡겨놓고 이 정치적인 사안은 손놓고 있는 청와대(?)나 핵심 정치인, 시민사회계 상층부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원자력이 값싼 전기를 공급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자부심이 넘쳐 원자력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무지하다고 원자력계가 푹푹 뭉쳐 데모한다면 요즘 세상에 곧바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원전을 위한 노력이 어느 순간 반대편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타협 불가능한 주장으로 바뀐다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단기적으로는 원전 건설 재개)로 대변되는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지 궁금합니다.

4. 사실 저는 대변인님과 같이 지난 토요일 경주 시민참여단 버스에서 거의 2시간 감금되다시피 있다가 환경공단으로 옮겨 진행된 사전 워크숍에서 탈핵단체들이 외부에서 확성기를 틀고 당장 공론화를 중지하라고 고함지르는 상황에서 겨우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타까웠

지만 예전에 무척이나 정정당당했던 탈핵단체의 구호에 비해 '맥스터 찬성할 거면 앞으로 너희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라, 너희는 후대에 모두 죄를 짓는 나쁜 놈들이다'라는 식의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내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탈핵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면 정말 치열하고 치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텐데, 탈핵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정말 사회운동, 시민운동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 열심히 학생 운동을 했고 소위 운동귀족이라 불렸던 학생회장들이 국회의원 되고 품내는 시민단체 대표가 될 때 이름없이 조용히 노동현장에 투신한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민주화 30년을 적나라하게 들여볼 기회가 생긴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불평등하고 갈등 심한 사회로 전락한 현실에서 시민운동의 활력조차 도그마로 굳어져 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5. 위원장님도 개별적으로 접촉한 시민사회계 전문가들을 시간 들여 설득해서 그 분들이 다 승낙을 했는데 다음날 되면 시도부에서 참가하지 못하게 해서 종합토론회에 시민사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고, 산자부에서도 청와대 수준의 워싱턴에서 참여 설득 중이라고 했는데, 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보다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 워싱턴의 타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저는 전국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공론화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탈핵 진영에서는 경주 공론화는 이미 결론 난 것처럼 보고 있지만 현재 모인 시민참여단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리 때도 공론화 시작할 때 찬반이 명확치 않던 참여자들이 각 그룹에서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방향, 즉 소수 의견으로 오히려 더 돌았다는 어느 위원의 연구결과와 아울러 저 역시 당시 신고리 공론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시작과 종결 때 의견이 달라진 경우들이 전체 결과를 결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주 시민참여단 역시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비판받는 경주실행기구의 바램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도 해보자는 공론화가 아니라 "실패할 위험이 있음에도" 진행되는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것이겠지요.

7. 저는 정치인 혹은 리더의 가장 큰 악덕이 결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 임시회의 때 좀 더 많은 논의가 되겠지만, 산자부를 넘어 정권(?) 차원의 노력이 개진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임시회의에서 나는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이후 과정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우여곡절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자이자 교육자,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때 반전반핵을 외쳤던 80년대 학생운동 세대로서, 2019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개인적으로는 국내 최장의 미해결 국책과제라는 별명을 가진 사용후핵연료 관리라는 사회적 '난제'를 '재검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21개월의 진통을 겪어 도출한 권고안은 원자력계와 소위 시민사회계 양쪽에서 '재검토로 결론 난 것이 무엇이나, 재탕이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아니라 N차 검토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든다. 다만 그 N이 무한대는 아니라는( $N \neq \infty$ ) 냉엄한 현실 앞에서 친원(찬핵)이든 반원(탈핵)이든, 우리 모두는 겸허해져야 하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고 기술적 해결이 쉬운 문제보다는 점점 더 둘 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유전자 복제, 탄소중립 등 과학기술정책에서 소위 난제(wicked problem,

難題)라 하는 문제로 사회적 합의 수준도 낮고 기술적 해결도 난망한 것들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난제다. 나는 거기에 덧붙여 사용후핵연료가 접제(sticky problem, 棲題)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합의도 부재하고 기술적 해결도 마땅치 않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어디서 손을 대어야 할지 막막하다. 잘못 했다가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투자처럼 함부로 덤벼다가 수십년을 되돌릴 수도 있는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 한두번에 해결하겠다는 한탕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이상 원자력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서 사고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다. 즉 친원은 악, 반원은 선이라는 도덕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마라톤에서 다리만큼 팔을 오래 흔들고 있어야 한다는 마라톤광 무라카미 하루키의 깨달음처럼,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시계를 훨씬 뛰어넘는 초장기 사용후핵연료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발(기술)만이 아니라 팔(정책)도 똑같이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수백년이라는 무지막지한 시간을 두고 기술과 정책을 사고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과 경험을 쌓는 일이 어찌 재검토로 충분하겠는가. **KMIF**